

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한다』
(『역사문제연구』 33, 2015)에 대한 반론

박유하*

1. 비판 방식에 대해
 - 1) 허위 적시
 - 2) 내용의 오해와 축소
2. 비판 내용에 대해
 - 1) 군인과 위안부
 - 2) 군인과 업자
 - 3) 조선인 위안부
3. 비판 태도에 대해
 - 1) 표상
 - 2) 곡해
 - 3) 진영논리
 - 4) 오만

*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나츠메 소세키로 본 근대』(문학동네, 2011); 『화해를 위해서』(뿌리와의파리, 2005).

1. 비판 방식에 대해

1) 허위 적시

『역사문제연구』 33호에 집담회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한다」¹가 게재되었다. 이들의 비판 역시 제일교포학자 정영환과 마찬가지로 오독과 곡해 그리고 적의로 가득한 내용이었던 것과,² 한 학자의 고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거친 말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학술지에 게재된 데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판은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각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책에서 비판했던 정대협에 대해서는 “맥락까지”(앞의 집담회, 561쪽. 이하 쪽수만 표시) 살피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책에 대해서는 맥락은커녕 쓰여 있는 내용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들의 비판이 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아니라 인상비평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 연구자가 아니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검허해야 했다. 그러한 성급함과 은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영환에 대한 반론도 참조해 주기 바란다.³

이들의 비판이 얼마나 성급한 오독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먼저 제시해 둔다. 나는 『제국의 위안부』 2부 3장, 즉 위안부

1 『역사문제연구』 33호, 2015.

2 정영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1965년 체제의 재심판」, 『역사비평』 111, 2015.

3 박유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1965년체제」, 『역사비평』 112, 2015.

의 재현의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의 문제와, 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 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소녀 이야기』의 경우 할머니의 증언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를 지적한 것이니 이 부분이 할머니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 후자에 관해서도, 나는 “그런 변화는 의식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듣는 이들의 기대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크다”라고 썼다.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증언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위안부들만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또 그런 증언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라고 해야 한다. (...)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민족 담론은 표면적인 피해 인식 외의 모든 기억을 말살시키려 한다”⁴(이하, ‘제국의 위안부, 쪽수’로 본문에 표기)라고 썼다.

그렇게, 이 부분의 비판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민족 담론임을 분명히 하면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영원히 안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안의 욕구에 대한 언급에 이어 이렇게 썼다.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혹은 우리가 아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보듬는 자신에 대한 사랑 대신 타자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더 큰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제국의 위안부, 134)라고.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이 위안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자 해방 후 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젊은 학자들은 “위안부경험

4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5, 133~134쪽.

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반성과 비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데도 저자는 이 비판을 그녀들에게 집중하죠. 예를 들어 〈70세가 되어가도록 과거의, (...)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처럼요. 용기의 부족, 미성숙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550)라면서 비난한다. 사실 이 부분은 『제국의 위안부』를 고발한 이들이 첫 번째 고발장에서 적시한 109곳 중의 하나였다. 지원단체는 이후 내가 반박문을 제출하자 지적 내용을 반으로 줄이고 고발 취지를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사라진 지적부분이다. 젊은 학자들 중에 소송문서작성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기서 문제 삼은 내용 역시 이들의 주장과 같았다.

해방 후 70년이라는 시기에 할머니가 70세라면, 해방 무렵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위안부 체험을 했을 리도 없다. 이 집담회는 이런 식의 웃지 못 할 오독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 33쪽에 나오는 웃고 있는 이미지의 사용을 문제 삼으며 사진 위치가 의도적(554)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비겁하다는 식의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는데, 33쪽은 물론 32쪽에도 34쪽에도, 이들이 지적한, 위안부의 숫자가 20만 명보다 적고 상대한 숫자도 적고 연애도 하는 존재였다는 대목은 이 사진이 실린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미지 사용 위치는 출판사가 정한다. 명백히, 나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들의 비판은 유감스럽게도 정영환에 못지 않게 악의적이고 그 왜곡 수준이 범죄적이다.

또한 『소녀 이야기』에 대한 나의 지적을 두고, 내가 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지만,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있었다. 나는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않는다. 또 나는 『제국의 위안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

에 “표현의 자유”(543) “학문의 자유”(543, 572, 575)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문제적인 기술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이들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면서 허위에 입각한 비방에 치중한다.

2) 내용의 오해와 축소

이들은 이 책을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있지만, 이 책은 구 일본 제국에 대해 한민족의 후예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묻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 굳이 민족에 대한 거리를 묻는다면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책이다. 정대협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 비판 자체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이용했거나 사로 잡혀 있는 진보좌파에 대한 비판이다. 정대협 대표가 일본에 우익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일본을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⁵ 그것은 일본의 진보가 꿈꾸었던 일본사회의 개혁과 통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대협의 운동도 위안부 문제보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생각은 무조건 우익으로 몰고 비난해온 진보의 운동 방식이 일본의 반발을 심화시켰다고 쓴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주기 바란다.

따라서 내게 이 책에서 민족주의를 “깨부수겠다”(578)는 식의 의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일찍 민족주의 비판을 시도했고, 오히려 민족주의 비판은

5 윤미향 대표 도쿄 YMCA강연, 2012. 6. 9.

내게 더 이상 큰 관심사가 아니다.⁶

다시 말하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민족주의 비판이 아니라 제국주의 비판의 책이다. 2014년 가을에 나온 일본어판이 일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민족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제국의 문제를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개인과 언론이 대부분 진보층이었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나의 책을 정확히 읽어 주었다.⁷ 특히 일본의 진보학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잘 정리하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⁸ 20여 년의 위안부 문제사 정리 속에서 나의 책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 것이 한국이 아닌 일본 측이라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식민지 내부의 위계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제국은 이야기하지만 식민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551) “동지적 관계를 저자가 발견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국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야 하죠”(551)라는 비판은 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내가 위안부의 “고통을 외면”(575, 576)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제국의 위안부』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인의 차별과 폭행에 언급하는 일로 군인과 위안부간의 위계관계, 즉 식민지내부의 위계를 다루었고(제국의 위안부, 142~164), 위안부와 제국, 위안부와 미국, 위안부와 한국을 보는 일로 일본은 물론 다른 제국에 대한 비판도 시도했다.⁹

6 박유하,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 사회평론, 2004; 박유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2011.

7 박유하, 앞의 글, 2015, 462~464쪽.

8 岩崎稔・長志珠絵, 『慰安婦問題が照らし出す日本の戦後』, 『記憶と認識の中の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15. 이 글의 번역문을 페이스북 2015년 10월 30일 '노트'에 게재하였다(<http://www.facebook.com/parkyuha>).

“공창은 제국주의 이동과 정착을 뒷받침한 장소”(제국의 위안부, 277) “그렇게 제국 만들기에 동참한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남성들을 위해 위안부를 필요 했다”(제국의 위안부, 278) “제국은 그렇게 조국을 떠난 상인들이 (...) 다시 말해 그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한다”(제국의 위안부, 279)는 기술들은 모두 그런 문맥에서 쓰였다. 이 책의 제목이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인 이유도, 조선인 위안부란 일본제국에 동원된 위안부였음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전쟁 문제로만 이해되어 온 위안부 문제를 제국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취지였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 일본제국의 일부로 포섭된 탓에 만들어진 존재이니 그런 제국의 책임을 일본 국가에 물으려 한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책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제국 비판을 간과했거나 무시했다. 이들이 『제국의 위안부』가 식민성 비판 없는 여성주의의 책이고 내가 제시한 위안부상은 제국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런 근본적인 오독과 곡해가 만든 일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은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근대일본지식인의 제국주의적 의식을 비판한 나의 다른 책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그 책이 나의 원점이기도 하다.¹⁰ 나는 아시아여성기금이 해산한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적었던 2010년에, 그해에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교도통신발 기사로 일본을 향해 쓰기도 했다.¹¹

9 박유하, 『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 앞의 책, 2015, 1장.

10 박유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2011(원본인 일본어판은 2007년 출간).

2. 비판 내용에 대해

1) 군인과 위안부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에서의 위안소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553)롭다면서 “낭만화”(553)된 재현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이 책의 반만 보고 한 이야기이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폭행과 강간에 언급한 부분 등을 다시 읽어주기 바란다.¹² 또한 재현이란 표현자의 주관이 들어가야 하지만, 나는 위안부의 증언집을 인용하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객관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들의 반발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일본인 남성에게 조선인 여성이 피해를 입은 일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물론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해만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본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란, 성차별과 계급 차별이 민족 차별 이상으로 직접적인 기제가 되어 여성들을 동원한 사태였다.

일본군에게 희생을 요구당한 여성들은 우선 일본인들이었다. 일본군은 1911년, 진해에 주둔기지를 만들 때 이미 군인전용 유곽을 기지 설계도 안에 넣었고, 일본 본토에서 여성들을 불러들이려 했다.¹³ 일본군이 위안부를 필

11 林裕河, 「現論 慰安婦問題で對話を」, 『岐阜新聞』 외, 2010. 2. 20.

12 박유하, 앞의 책, 2015, 142~162쪽.

13 竹国友康, 『ある日韓歴史の旅』, 朝日新聞出版社, 1991, 119~120쪽. 1911년에 작성된 유곽설계도가 일본군에 의한 것이고 여성주권을 의뢰한 상대가 “동경업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요로 한 것은 멀리 떠난 자국 남성을 위한 것이었으니만큼, 자국 여성이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내가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등치”(573)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의 위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했다.¹⁴ 위안소에서 일본인 여성들이 가장 임금이 높았다고 말한 이유도 이들 간의 위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보호한 것이냐면서 반발하지만, 보호는 꼭 착취의 반의어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착취하면서도, 과도하게 착취하는 업자나 규범을 벗어난 군인으로부터 위안부를 “보호”(553)했던 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을 대체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선인 위안부는 조선인일지언정 일본 국민이었기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헌병은 군인과 위안부와 업자 사이에서 이들 모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존재였다. “거 헌병대라야 군인들이 겁을 내요. 헌병대라야. 저 인제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오는 놈들도 있거든. 그래 헌병대 와서 조사하고 헌병대가 짝 깔렸어요. 헌병대가 처리하지”¹⁵라는 증언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일본 정부가 조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발행한 5권의 자료집에도 군인들의 폭행 등을 군 상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¹⁶ “해남도 위안소는 군대가 위에서 일정한 지시를 했다. 해남도에서도 처음 상당기간 1할씩 받았다. 그러나 군대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주인에게 수입의 6할을 여자들에게 주고 주인이 4할을 갖도록 정해 주었다”¹⁷는 증언도 국가/

14 박유하, 앞의 책, 2015, 158쪽, 외.

1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들리나요』, 2013, 110쪽.

16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編,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1~5, 1998.

1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281쪽.

군인이 위안부를 보호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군인들의 폭행과 강간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의 관계가 명료한 위계 관계였음도 분명히 지적했다. 따라서 『제국의 위안부』에 군인과 위안부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식의 지적은 이들이 책을 편파적으로 읽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내가 위안부에 대해 군수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군인에게 위안부란 한편으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책임주체대상에서 군을 뺐다거나 책임을 “추상화”(546)했다는 것은 이들의 오독의 결과다.

이들은 위안부의 연애에 거부감을 표하지만 위안부의 부탁을 받고 모르면 그 외 군용약품을 빼내려 했던 군인이 발각되어 중영창 30일에 처해지기도 한 사실도¹⁸ 있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지적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 혹은 조선인, 일본인간의 차별, 위계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내가 언급한 케이스들을 예외로 간주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정황이 예외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예외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심리는 위안부의 체험을 소외시키는 일이다. 듣는 이들의 그런 심리가 바로 “만주 얘기 난 누구한테 안 혀. 첩피해서……. 집에 저렇게 와서 질문하면 당한 일만 얘기해 주지”¹⁹라는 식의 반응을 만든 것이기도 하다.

“위안소에서 나와 조선인 군속과 함께 군 지정 철공소를 경영”²⁰ 했고, “수류탄 같은 무기를 제조도 하고 수리도 하는 군수공장을 하면서 군속으로 월

18 中支那派遣 憲兵隊, 『陸軍軍人軍屬非行表』 1941. 11; 주 16의 문헌 2.

1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풀빛, 2001, 207쪽.

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262쪽.

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의 구술을 기록한 이는 “서류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쓴다. 드러난 숫자나 사례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내가 사용한 동지적 관계라는 개념은 이러한 중층적 구도를 표현한 단어였다. 일본제국이 전쟁을 하게 됨에 따라 식민지였던 조선이 그 구조 속에 들어간 정황을 나는 국민 동원으로 간주했고 전쟁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이 동지적 관계의 1차적 의미였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 중에는 위안부란 군인을 돌보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한 이도 있다.²¹ 2015년 8월에 나온 한 자료는 위안부는 군속이었다고까지 적고 있다.²² 물론 그러한 정황을 보는 일이 곧 “같은 위치”(550)나 “동등성”(551)을 주장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 간호원은 몇 명 없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다. 환자에게는 냄새도 나고 (….) 우리는 그런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다. 환자들에게는 한 끼에 우메보시 한 개와 미음 한 공기씩을 갖다 주었으며 입이 다쳐 못 먹는 환자에게는 누운 채 입을 벌리라고 해서 떠 넣어주곤 했다”(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 178)는 정황은 오히려 위안부들이 근로정신대와 같은 역할마저 요구받은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술이다. 동지적 관계임을 말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인 일본군과 비슷한 틀로 이해할 때 보상요구가 오히려 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강제징용된 사람들을 배제”(558)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개념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 했다. 물리적 강제연행이라는 이해를 중심으로 불법성만 주장해온 지원 단체나 연구자들의 방식에 물음을 던

21 배춘희 할머니 인터뷰, 2014, 4.

22 佐場 清, 『慰安婦は軍属—辻政信が「明言」』, 2015, 8, 3(허핑턴포스트 블로그: http://www.huffpost.jp/kiyoshi-hasaba/comfort-women_b_7922754.html).

지고 나의 방식을 제안했던 것이다.

비판자들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이 북한하고 한국은 쥐야지. 대만까지도 이해를 해. 거기도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쳤으니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같은 일본사람 취급했거든. 이렇게 끌어갔으니께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러나 중국, 필리핀은 다 영업용으로 돈 벌러 간 거지. 그러니 그건 안 줘도 괜찮고”²³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동지적 관계라는 단어에 담은 1차적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 또한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는 지원 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던 위안부의 존재도 되돌아보아야 한다.²⁴ 이들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따라서 지원 단체나 학자들에 의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군인과 업자

이들은 업자에 대한 나의 지적에 반발하면서 포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화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546)라며 비난하지만, 나는 이미 10년 전 저서에서 업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²⁵ 따라서 업자라는 존재는 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언급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서 국가의 착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제국주의에 가담한 업자의 착취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116쪽.

24 배춘희할머니, 전화녹취록, 2013. 12. 18.

25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이파리, 2005.

또한 나는 업자를 조선인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으나 동원 현장에는 대부분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 특히 규모가 큰 유곽 등은 오히려 일본인 업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²⁶ 그러나 일선에 나가거나 작은 규모의 업자 중에는 조선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인 포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547)이라는 단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선인 위안부가 더 많았다면 이들의 관리자로서는 조선인업자가 많았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다.

업자에 대해 말한 이유는 일본의 책임을 회색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부들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 “옷은 잘 해 입혀. 왜 해 주냐면, 그거고 빗. 저거가 돈으로 해 입히고 빗 갠으라고. 자꾸 해 줘”²⁷라는 증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업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가네아마는 손님을 놓친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못 나가게 했다”(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203)는 식으로 업자들이 위안부를 직접 감금하고 강제노동 시키는 현황이 오늘에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란 실은 업자의 경제 / 이윤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이들을 착취한 이들의 존재까지 보지 않고서는 위안부 문제의 전모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업자의 존재를 강조한 이유다.

여자들을 만주로 데려가는 업자와 여성을 중심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최명익의 소설 『장삼이사』에도 업자가 등장해, “만주로 북지로 댕겨보면 돈 벌인 색시당사가 제일인가 보든”이라 말하며, “영업하는 덴 만준가요 북진가요”라는 질문에 “뭐 안 가본 데 없디요. 첨엔 한 사오년 일선으로 따라 당기다가 너머 고생스럽더라니 그 담엔 대런서 자리 잡구 하다가 신경 와선 자식

26 西野 瑠美子, 『日本人‘慰安婦’—愛国心と人身売買と』, 現代書館, 2015.

2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앞의 책, 177쪽.

놈들에게 다 밀어 매끼구 난 작년부터 나오구 말았소.” “사실 내놓구 말이다, 돈벌이루다 그만한 노릇이 없셤다. 해두 그 에미나이들 송화가 오죽한가요 거 며 한 이십삼명 거느릴래은 참 별에별 꼴 다 톱넨다……. 툇하면 앓아 눕기가 일쑤요, 그래도 명색이 사람이라 앓는데 약을 안 쓸 수 없으니 그러자면 비용은 비용대로 쳐들어가고 영업은 못하고, 요행 나오면 몰라도 덜컥 죽으면 돈 천원쯤은 어느귀신이 물어갔는지 모르게 상비(喪費)까지 보충이 칠을 해서 없어진 다는 것이었다.” “앓다 죽는 년이야 죽고파서 죽갔소, 그래건 또 좀 양상이다. 이것들이 제 간에 난봉이 나디 앓소, 제법 며 죽는다 산다 하다가는 정사합네 하디 앓으문 달아나기 일쑤구……”라는 말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선인 업자는 기차 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인신매매해 온 여성을 구타할 만큼 가혹했다.²⁸

당시 유괴마라 불렀던 하운명의 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포주들의 눈물도 인정도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경찰도 분히 여기고 그 서에서는 다시 전매한 곳으로 조회를 하여 최후까지 구해낼 방침으로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경찰은 “여성을 흥측한 포주의 손에서 다시 북지로 팔아넘기기 전에 그야말로 위기일발” 직전에 구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경찰은 포주의 범법행위를 단속했다. 이 사실은 국가와 업자의 관계가 최소한 범법행위에서 공범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²⁹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안소에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공급한 대규모 업자들은 적지 않은 부를 쌓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런 경제적 착취자

28 최명익, 『비오는 길』, 『최명익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4, 233~235쪽.

29 『每日申報』 1941. 3. 2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 2007 수록.

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위안부 문제가 하위화된 민족, 성, 계급의 문제라는 사실이 공유되면서도 아직 빈곤계층을 착취한 중간계급의 책임은 물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내가 업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한 이유는 책에서도 쓴 것처럼, 지원 단체가 해결방식으로 법적책임을 주장해 왔고, 그 주체로 국가만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범법에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미 범죄시되었던 업자들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것은 “책임을 너무 추상화”(546)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문제를 선명하게 하는 일이다. 구조전체를 보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37년에 “상하이 파견군이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고 서일본 각지 유곽에 협력을 요청”³⁰했을 때,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응한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중 한 유곽이 협력”했고, 그 뒤를 이어 다른 유곽 주인들이 가담자로 나섰다. 한편에서는 “조선인이 인솔해 온 한 무리도 있었다. 서주전 때 화북에서 군대를 따라왔지만, 무한 공략전에서 화북에서 이동한 제2군과 행동을 함께 한 자들, 제11군을 따라 입성한 자들, 상해에서 온 자들 등 그 경로는 각양각색이었지만 개장당초부터 한구병참이 부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에서 위안소를 개설하고 싶다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적경리에 수용했던 것이다”³¹는 정황도 존재했다.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이 있었기에 위안소는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런 이들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일본 국가라는 대악(大惡)의 책임을 묻는 일이 소악(小惡)의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30 長澤健一, 『漢口慰安所』, 圖書出版社, 1983(번역은 박유하).

31 위의 책.

이다. 작은 악, 협력하는 악에 대한 고찰과 고발 없이는 국가의 횡포에 대한 가담과 협력을 막지 못한다. 내가 업자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3) 조선인 위안부

이들은 나의 문제 제기가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고작 80년대로 돌려놓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한국 사람이 항상 가난에 빠지니깐 깨끗한 색시들을 승낙아래 돈을 벌러 가는기야. 그때 돈으로 50원이나 100원이나 받으면 기한은 5년 기한을 한다던가 3년 기한을 한다던가 이렇게. 전쟁이나 일본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실제로 많거든. 자기가 돈 벌기 위해 가는 사람은 많다고”³²라는 증언, 위안부들 자신조차 인식했던 구조에 귀를 닫는 일이다. 식민지화란 경제적 착취구조 속에 놓이는 일이고 정치적 지배는 그러한 차별 / 착취 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특요원으로 불리는 낭자군, 즉 해군용 위안부는 오사카의 히다, 마츠시마 유곽이나 그 주변의 사창, 고베의 후쿠하라 유곽의 여자가 많았다”고 증언한 일본인업자가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³³는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 해도 진짜 일본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는 사실, 즉 차별의 본질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특요대 여자는 조선과 오키나와 사람뿐이었고, 내지 사람은 없었다”³⁴

3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1999, 118쪽.

33 西野 瑠美子, 앞의 책.

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만, 조선인 위안부가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의미에서 가장 힘든 일을 요구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해될 것이다.

위안부 체험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도 달랐다. 예를 들면 옷은 무엇을 입었느냐는 질문에 한 위안부는 “그때는 옷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떤 아들(사람들)은 일본 기모노도 입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 나이 많은 것들. 그것들은 좀 배왔다고 일본말도 잘 하고, 그 사람들은 일본말 잘 한게(잘하니까) 헤이타이상(병사/ 군인)들이 더 좋아하대. 말도 통한게(통하니까) 우리 등신 같은 것들은요, 나이가 어려놓은게 뿔이 뿔인지도 모르고, 이러자카면 이려고 저러자카면 저러고, 그런게 낙이 없어가 마 해방됐다 카니 죽기 살기로 나와가, 전부 다 나왔을기요. 우리는 고마 한목에 짝 나온게 뭐 한 30명 나오고, 뒤에는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뭐 일본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일본으로 갔는 아들(사람들) 많아요. 일본 쪽으로”³⁵라고 대답한다.

지연단체가 주장해 온 학살과는 다른 모습도 주목해야 하지만 이들과 일본군과의 관계와 기억이 이처럼 연령, 언어숙련도 혹은 성격에 따라서도 달랐다는 점은 더 주목되어야 한다. 위안부의 증언집은 자신들의 체험도 기술하지만 이처럼 다른 위안부의 체험도 기술한다. 젊은 학자들의 반발은 이러한 다양성을 외면하는 일일 뿐이다. 위안부들은 있는 그대로 말했고 증언집에 그대로 게재되면서도,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재현된 결과가, 우리 앞에 있는 위안부상이다. 그런 문제의 과정을 비판하고 결과를 보자고 한 것이 나의 책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과 평화와 동지가 있었다 해도 위안소가 지옥 같은

34 城田すずこ, 『マリアの賛歌』, かにた出版部, 1971, 166쪽.

3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앞의 책, 115쪽.

체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해도, 그녀들
 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으로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 그녀들은 그저 가난하거나 식민지의
 여자이거나, 가부장제속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립 가능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교육(문화자본)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추업에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향했다면 무엇이 그런 표면적인 자발성
 을 끌어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남성이고 군대이고 국가였다. 그리
 고 일본제국이였다. 다시 말해 위안부란 어디까지나 국가와 남성, 그리고 격
 리된 남성 집단을 만드는 전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긴 존재다. 위안부의
 자발성이란,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
 (선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폭탄이 터지는 최전방에서
 도 폭력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욕구를 받아 주어야 했다”고 『제국의 위안
 부』에 분명히 썼다. 일본에 책임을 묻은 이유도 조선인 위안부의 본질을 바
 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젊은 학자들이 말한 식의 책이라면 책임을 물
 을 이유도 없다.

3. 비판 태도에 대해

1) 표상

이들은 내가 제시한 것이 위안부의 “대변”(555)을 자임한 일이라며 “진짜”(555)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책임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 나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자고 했을 뿐이고 그 이유는 앞서 쓴 바와 같다. “진실은 없다”(587)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들은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려 했던 이야기다. 상반되는 두 개의 상은 둘 다 진실이지만 한 쪽에만 집착하는 한 어느 쪽도 진실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를 들면 위안부의 웃는 얼굴 사진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며 나를 비겁(554)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 사진은 사진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웃는 얼굴에서 “망향의 염”(제국의 위안부, 33)을 읽어낸 일본인 기자의 시선도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잡지에 게재하면서 내가 사용한 기자의 설명이 붙어있는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사진만 사용하며 독자로 하여금 나의 도덕성을 비난하도록 유도한 행위야말로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사진을 그저 “불편”(554)하게만 느끼는 것은 사진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여성(위안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터인데, 그것은 실은 이들 안에 자리 잡은 여성 혐오가 만드는 일이다. 이들이 내가 인용하고 기술한 참혹한 위안부상에는 언급하지 않고 자발성/매춘으로 보이는 자료에만 주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기존이해를 벗어나는 위안부상에 불쾌감을 느끼고 부정하는 일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위안부를 부정하

고 “배제”(557)하는 일이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결과적으로 그녀들의 자존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군인과의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할머니를 두고 굳이 군인의 “괴롭힘”(568)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감정이 시키는 일이다. 이들은 내가 “폭력적으로”(572) 위안부에 대해 서술했다고 말하지만, 당사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단정들이야말로 이들이 말하는 “권력”(568)행사다. 기금을 받은 위안부들이 그저 “조바심”(561) 때문에 “흔들”(561)린 것이라고 보는 단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금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위안부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제한다. 지원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로서는 아버지가 더 밋다는 위안부의 발언이나 위안부는 “군인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위안부자신의 증언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예들을 “부풀리기”(558)나 “과편”(569)화로 보고 싶어 하는 심리야말로 이들 안에 자리 잡은 배제 욕망이 시키는 일이다.

이들의 위안부 배제는 “해결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은 것 자체도 잘못되었”(587)는 말에 특히 역력히 드러난다. 보상과 해결을 원하는 위안부들을 “폭력적으로” 무시하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나를 “권력”으로 호명함으로써 약자를 모욕하는 강자로 표상한다.

2) 곡해

내가 한일 간의 화해를 “만병통치약”(565)으로 간주하고 있고 화해에 “집착”(565)한 탓에 “개인들을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해 동원”(551)하고 있으며,

(박유하가) “화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는 순간이에요”(551)라는 억측마저 이들이 서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서경식 등의 재일교포 지식인의 『화해를 위해서』 비판을 안이하게 차용한 결과일 것이다.³⁶ 그러나 내가 10년 전에 『화해를 위해서』를 쓴 것은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소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화해를 하고 끝내자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논의의 지평을 공유하자고 했고, 그것을 위해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정보와 인식의 보충을 시도했을 뿐이다.

한일 화해에 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 안의 갈등과 분열, 좌우/남북 갈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한일 화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미군 기지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것은 동아시아 화해이고 당연히 남북화해도 들어간다. 일본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언급 가능할 만큼 아는 대상이 일본뿐이기 때문이다.

3) 진영논리

이들은 정대협이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그 자제력을 칭찬하기까지 하지만 실상은 정대협도 고발을 검토했었다.³⁷

정대협에 대한 나의 비판은, 민족주의 비판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이

36 박유하, 『“우경화” 원인 먼저 생각해봐야-서경식 교수의 ‘일본 리버럴’ 비판, 이의 있다』, 『교수신문』 2011. 4. 18.

37 발간 당시의 정대협 관계자 페이스북과 민변 변호사의 전언 등에 의함.

들도 보이고 있는 당사자 배제에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국민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고, 정대협이 주장해 온 법적 책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할머니들도 있다.³⁸

젊은 학자들은, “할매들은 다 죽어 가잖아. 그런데 모금을 받지 말라, 그것 받으면 더러운 돈이다, 화냥년이다, 이런 귀거스리는(거슬리는) 소리만 하더라구.”(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117) “지금 정대협에서는 1억5천을 요구한다. 천 년 세월이라 말이여 이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1억5천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나이 먹어 자꾸 죽어간다. 아무데고 마저 주는 돈 받아서 쓰고 죽겠다. 다수 이거야. 그냥. 딴 뜻은 없는 것 같아. 할머니들 요구도 무리가 아니고. 거기서 인제 또 정대협에서 (국민기금을 주지 말라고) 일본에 소문을 퍼뜨려 봤더라구. 그래서 기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지”(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116)라는 오래된 푸념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정대협의 운동 방식인 강제연행된 소녀를 강조하는³⁹ 식의 소녀에 대한 집착은 위안부들 간의 차이를 낳고 매춘 차별을 조장한다. 그것은 위안부가 목소리를 내도록 했던, 다시 말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서 보호하고 당당하게 만들었던 정대협의 원래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정대협은 여전히 매춘과는 구별하고 싶어 하고 이런 일에 대한 의문을 이제는 정대협과 함께 했던 일본인 학자도 품게 된 상황이다.⁴⁰

38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구술자가 원치 않아 자세한 이력은 생략한다(2014. 2).

39 정대협이 감수한 것으로 알려진 양굴뚝만화제작료집 『지지 않는 꽃』(여성가족부, 2014. 6)은 늑대에게 둘러싸인 소녀(156쪽) 등, 위협, 공포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일본군에게 끌려가는(133쪽) 물리적인 강제연행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서울시가 후원한 정대협 행사 포스터에는 “조선의 소녀 20만, 일본군에 의해 대부분 학살당하고 조선으로 살아 돌아온 소녀는 2만여 명,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가 243명”이라고 쓰여 있다(2014. 3).

40 2015년 9월에 DMZ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경순 <레드마리아 2>에서 나가이가치長井和는 2014

정대협은 위안부들이 대부분 사망했다고 여전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위안부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들이닥쳐 주인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났다가 포로로 수용되었고,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나 “위안부들이 가득”(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69) 탄 배를 타고 돌아왔다고 위안부들은 증언한다. 이들은 “여자만 해도 한 500명은 되”는 수용소에 있다가, “한 천 명”(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208)은 되는 귀향선을 타고 돌아왔다.

이들의 사고는 나의 여성주의가 “현 정부의 여성부와 비슷한 입장에만 머물”(549)고 있다거나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데서 드러나듯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나의 “포지션이 애매”(548)하다고 말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소설가의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자세를⁴¹ 배우기를 권한다.

4) 오만

이들은 이 책을 대중서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을 향해 집필한 것을 문제시한다. 내가 이 책을 굳이 학술서 형태로 쓰지 않은 것은 일반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에서 기존권력을 갖지 않은 이들을 향해 말을 걸기 위해 일반서로 쓴 것이었고, 실제로 그에 대답해 준 이들도 언론과 일

년 여름 심포지엄에서 전 정대협대표가 조선인은 “매춘”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본인위안부와 구별지으려 했다면서 난감한 심경을 표했다.

41 2015년 9월 13일, 고종석은 트위터에서 “박유하와 이영훈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그 둘을 구별 못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수준이고, 박유하의 섬세함을 이영훈의 사회적 다위니즘과 몽뽕구려 찬양하는 것이 한국 뉴라이트의 수준이다. 애제!”라고 쓴 바 있다.

반 시민들이었다.⁴²

그러나 이들은 그저 학회지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은 학제적 연구를 정리한 책이고⁴³ 따라서 하나의 학문의 틀로 재단 받아야 하는 학회지에 투고할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쓰인 글이었다. 이 책이 “학계의 기존연구를 포용하려 하지 않”(581)는다고 말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언급했다. 특정 학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선행연구가 언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학계를 비판하려는 의도”(581)를 가진 바 없으나 국가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한국인 위안부 문제 연구자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위안부 연구는 90퍼센트 이상이 일본인의 연구다. 20년 이상 문제시되어 오면서도 한국인의 연구는 결코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이자 문학 연구자이기에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했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단일하지 않은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 지원 단체와 해당학계의 책임이 아닐까. 학계에서 인정된 인신매매나 업자, 일본이 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이 알리지 않은 탓에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단일하지 않은 정황이 되었다. 나의 책이 전문가를 향한 것인지 대중을 향한 것인지 “어떤 지점에서 서 있는지 어정쩡”(580)한 것으로 보였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가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42 2013년8월 발간 이후 경향신문을 필두로 『프레시안』 등, 『한국일보』 등 적지 않은 언론들이 이 책의 리뷰를 게재했다. 또한 고발 직후에 페이스북에서 만난 미지의 시민들이 옹호/지지해주었고, 이 만남이 기반이 되어 작은 평화시민단체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진보의 문제를 진보 측 시민들이 인식/공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43 장정일, 『원점을 직시하기, 혹은 복잡성을 마주하고서』,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3의 목소리 토론회』, 2005. 2.

거부감(549)에서 출발한 이들의 비판은, 내가 자의적인 해석(544)을 바탕으로 위안부를 “의도적”(554)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안전장치”(544)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겁”하다고까지 말한다. 심지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566)도 아닌 “대중서”(561, 572, 581)라는 식으로 나의 책을 전부정한 끝에 나에게 “스스로 돌아보”라(571)는 훈계까지 한다. 호칭조차 “이사람”(547) “자기”(559)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들의 오만에 내가 대답하는 이유는 뒤늦게나마 이들의 앞으로의 연구 자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이다.

오해와 편견 없이 읽는다면,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에 검혀한다면,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를 명예훼손하기는커녕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이들을 향해 매춘을 재의미화한 책이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해 온 이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책, 위안부 문제에서의 착취의 문제를 물으려 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방법은 아니”(584)라고 한마디로 깎아 내리는 이들의 오만에서 나는 “젊은 역사학자들”의 지적(知的) 위기를 보았다. 패기는 좋지만 오만은 지(知)를 영글기 전에 피폐하게 만든다.